

국립트라우마센터, 내년부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윤호중 행안부장관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강기정 시장 “센터 안정운영 정부와 적극 협력”

내년부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치유센터 사업비를 정부와 분담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광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부터 치유센터 기관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운영비 문제가 해결됐다. 광주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치유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비용은 국가와 광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 왔고, 최근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반면, 각종 치유 프로그램 등 사업비는 국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분담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 시장과 윤 장관은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그

동안 센터를 다니며 얻은 마음의 안정·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자들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아와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운영비를 내년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국가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드리고 싶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원예치유·운동치유 프로그램, 사례관리 상담 등 개인 맞춤형 치유재활 프로그램과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 3월 27일 ‘돌봄돌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 서구를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광주시장 시민홀에서 열린 2025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및 내빈들과 함께 행사를 둘러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 있도록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복합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이나 선별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복

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해왔다.

윤 장관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선별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복

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송고한 정신을 기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지역 산단 경유 철도망 ‘신산업선’ 추진한다

시, 13일 빛그린국가산단서 5차 국가철도망 반영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논의

광주연구개발특구~진곡·하남산단~광주송정~평동산단~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을 경유하는 철도망인 ‘광주신산업선’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빛그린국가산단 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국가철도 광주 신산업선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 신산업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 고시)에 반영돼 추진 중인 대구 산업선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광주 신산업선의

추진 경과를 공유한다.

이어 최동호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철도망 검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학계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 신산업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신산업선’은 광주 서북·서광산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진곡·하남산단~광주송정~평동산단~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광주지역 산단의 90%가 밀집된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다.

빛그린국가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인 ‘인공지능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직결되는 핵심 축이다.

전남·북이 건의한 서해안선(세남금~영광~목포)이 지나는 영광까지 연결되면 국토 서남권 산업·물류·교통을 아우르는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호 시 광역교통과장은 “광주 신산업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

탄소중립위, 정부안 확정…국무회의 심의만 남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면 ‘광주공항’서 계속

“서울-여수 2시간 이내 ‘내륙철도 시대’ 열자”

조계원 의원 제안, 김민석 총리 “흥미롭다…별도 검토”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를 여는 ‘한반도 KTX’ 내륙 노선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돼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이어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와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현재

추진 중인 42km 직선화는 고작 15분의 물리적 시간 단축 효과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식의 부분 개선으로는 KTX-해마나 EMU-320 같은 미래형 고속열차를 투입해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기존 노선 개량이 아닌,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신규 노선 ‘한반도 KTX’를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안된 ‘한반도 KTX’는 남서에서 용인, 안성을 거쳐 청주-세종(북대전)-전주(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약 325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이 신설될 경우, 서울-여수 간 소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히 여수 교통망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한반도의 철도 대중편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사업비는 20~25조원으로 추산되나, 남서울-청주 구간에 민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은 10조원 내외 수준”이라며 “이는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전체 직선화 비용과 비슷하면서도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교두보”라고 역설했다.

조 의원의 제안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나봐도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다. 별도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좀 더 구체적인 예산타당성 등을 지밀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한반도 KTX’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AI인재 조기 양성에 내년 1.4조원 투입

교육부, 5.5년만에 박사학위 취득 등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가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5.5년만에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AI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초·중·고등 관련 교육에 총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관련 초·중·고등 교육에 9000억원, 고등 교육에 5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AI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한다.

AI 기술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 3개교에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 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연구단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연합뉴스